

환경영향평가 '삼진아웃제' 도입

올해부터 환경영향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다 3번 연속 적발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막기 위해 평가대행 계약을 본공사와 분리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 작성을 근절하고 평가서에 대한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관련고시·예규 등을 제·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개월, 2차 6개월간의 업무정지 명령에 이어 3차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정지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된다.

과거의 처벌규정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업무정지 등으로 돼 있다.

올 환경분야 R&D 투자 확대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에 환경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위해 2천296억원을 반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에서 올 5.2%수준으로 확대되며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 연구개발예산은 지난해 443억원에서 982억원으로 증액된다.

부문별로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에 500억원, G7 환경기술연구개발에 180억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에 200억원, 국립환경연구원사업에 233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2001년 환경정보화촉진 시행계획

환경부는 새천년을 맞아 모범적인 환경국가상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보화사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크게 환경정책 수행 사업,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사업, 환경정보 체계구축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환경정책 분야로는 「깨끗한 공기 확보」 「맑은 물의 보전과 공급」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은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에 환경분야 연구

개발투자를 위해 2천296억원을 반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에서 올 5.2%수준으로 확대되며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 연구

개발예산은 지난해 443억원에서 982억원으로 증액된다.

「자연 생태계 보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 등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분야와 별도로 신규 사업에 대거 착수키로 했다.

계속사업 분야로는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 「대기환경 예측평가시스템」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폐기물 재활용 종합정보시스템」 「환경산업 및 기술정보시스템」 등 5개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스템」 「환경행정통합시스템」 「환경오염도 웹GIS서비스시스템」 「환경오염데이터 정도관리시스템」 등 4개이다.

올해에는 총 9개 종합 정보화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위해 이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감시센터설치에 착수키로 했으며 올해는 우선 수도권내 TMS 설치사업장을 관할하는 수도권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TMS 설치를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 종합정보 시스템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폐기물자원 발생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목표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96년과 97년에 1단계 사업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어 2단계로 98년과 99년에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으며 3단계 사업기간인 올해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윈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정책

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완성단계로 해외정보망 및 환경산업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요체다. 이 기간에 환경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누계 30만건에 이르는 환경산업기술 DB구축, 사이버 환경커뮤니티 운영, 장비 및 프로그램 확충, 사이버 컨설팅시스템사업,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사이버 환경벤처 육성지원시스템, 환경상품 E비즈니스 구축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정착단계로 환경산업기술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대책위원회」 구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 구성된다.

위원회의 역할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피해예방, 국제협력 등에 관해 자문하는 일이다.

고재영 폐기물자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담당자들은 물론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장,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장 등 관련부처 12명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농약공업협회, 교수, 녹색연합 등 민간위원 13명 등을 포함, 30인 이내로 운영된다.

환경호르몬 물질 TBT 사용규제 강화

환경호르몬 물질인 수산화트릴알킬주석(TBT) 사용에 관한 규제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의 하나로, 조개나 물고기 등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선박 밑바닥이나 해양 구조물 등에 칠하는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BT의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고시'를 개정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성적표지Ⅲ 올 2월 도입예정

사전오염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제품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2월 환경성적표지제도(TYPEⅢ)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99년 하반기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방안 논의 ▲2000년 2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해 LCA를 수행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가기반 및 기초 소재에 대한 국가표준 환경성정보 구축 등 추진해 왔다. 환경부 최병철 환경경제 과장은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증진 등의 필요성에 따라 LCA 수행기준 개발과 함께 올 2월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ISO에서 진행중인 3가지 유형의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규격(ISO 14020's)의 하나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비교우위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제품의 원료채취 단계에서부터 제조, 사용, 폐기처리 등 환경성을 전 과정에 걸쳐 평가하는 전과정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를 숫자 등으로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이다.

금강·영산강 특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지난 11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양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1km~300m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특별법은 또 양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km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11개 국산 환경신기술 첫 공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11개 국산 환경신기술을 첫 공인하고 지난 11월 30일 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환경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새로 개발했거나 개량된 환경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 가운데 공인기관(환경관리공단)의 기술평가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술을 말한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주)금호산업의 '단일반응조 간헐방류식 장기포기 공정에 의한 하수고도처리기술' 등 16개가 환경신기술로 지정됐으며, 그중 11개가 국산기술이다. 환경관리공단측은 현재도 28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 (주)한화는 폐·하수처리기술인 '우로변경형 질소·인 하수고도처리기술', (주)한들산업은 소각기술인 '파쇄·다단(多段)건조상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건조기술'을 선보였다. 또 (주)정한산업은 폐기물 자원화기술인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토지개량제 제조기술'을, 그리고 (주)종합공해는 하수처리공법인 '압축여재 심층여과시설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부유물질 제거기술'을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현대건설은 폐화재나 미생물 제거 투입없어도 하수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기술로, (주)대우조선공업은 대우형 역진식 구동 화적자 설계기술로 관심을 끌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공인된 환경신기술에 대해 현장 적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입찰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폐기물은 1만4천7백원에서 1만6천1백원, 소각폐기물은 8천6백원에서 9천4백원, 재활용성폐기물은 5천50원에서 5천5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현행 2만9천원의 반입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수도사용료도 오는 3월 점검분부터 평균 29.62% 인상돼 월평균 23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2천2백50원에서 2천9백원으로 6백50원 오른다.

[청주시]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

청주시는 환경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월 6일 밝혔다. 우수처리시설 관리업 종사자(7명),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종사자(5명), 대학교수(2명) 등 14 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반기마다 관내 7백여개 오염 물질 배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오염 물질 배출 업소나 종사자가 전화(043-220-6244)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신속히 출동, 자문 및 기술 지도도 해 줄 방침이다.

(주)에코프론티어, 환경신뢰성평가방법 개발

향후 기업들의 환경경영 및 신뢰 여부가 기업의 가치평가와 투자유치 등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또 글로벌화 시대흐름에 맞춰 환경신뢰를 얻지 못한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 뒤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환경벤처기업이 기업의 환경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신뢰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지식기반 환경포털솔루션 선두기업 (주)에코프론티어(대표 정해봉·www.ecofrontier.co.kr)는 99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를 위한 방법개발' 용역을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정해봉 사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방법은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사용할 기업의 환경신용평가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라면서 "즉 어떤 기업이 환경신용이 더 좋은 기업인가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천오염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과 제품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2월 환경성적표지제도(TYPEⅢ)가 도입된다.

대전시-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

대전시는 올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평균 8.1% 인상하고 하수도사용료는 3월부터 29.62% 인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11당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은 8천6백원에서 9천4백원, 사업장

기업의 환경신뢰성 평가가 활성화되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30대 기업들의 환경점수가 세부적으로 매겨지고, 이는 언론과 방송 등에 공개돼 정부, 투자회사, 금융기관, 국민 등이 개별기업들의 환경경영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기업들의 이미지 및 존재여부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코프론티어는 올 2월부터 도입되는 기업의 환경성적 표지제도의 핵심인 전과정평가(LCA)필수 소프트웨어(INSTEP)의 개발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로 올 5월경 완료될 것으로 전했다.

GIS소프트, 수질환경관리 GIS S/W 할인판매

GIS소프트(대표 정동희)는 수질환경관리 GIS 소프트웨어 패키지 네오맵엔비 2.1을 출시했다.

네오맵엔비는 수질오염도를 예측하고 오염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질데이터 수집과정에서 GPS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확장했다. GIS소프트는 창립 5주년을 기념, 이를 90% 할인한 3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활성미네랄을 이용한 폐수처리 L당 500원에 처리

오·폐수, 축산폐수, 난분해성 염색폐수 등을 저렴하면서도 탁월하게 처리하는 '활성미네랄 첨가제'가 국내에서 생산, 공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첨가제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획기적인 폐수처리기술로써 최근 국내기업 AR코리아(대표 김병욱)가 기술을 이전받아 제조·생산하며 수처리전문업체인 명인터내셔널(대표 한억희)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활성미네랄에 의한 폐수처리방식은 폐수 중에 활성미네랄을 첨가하는 것만으로 가시적인 현탁물질을 비롯해 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용해성의 유기물을 석출시켜 단시간에 오수처리를 끝마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첨가제를 이용한 폐수처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다.

또한 유기물 이외의 화학물질의 분해, 탈색, 탈취 등의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천연광물에서 추출하는 이 활성미네랄은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약제 등의 무기물(AI, Fe, Mg 등)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의 함유가 전혀 없으며, 많은 종류의 미네랄이 황산산성 상태의 수용액상으로 존재하면서 '강한 산화작용'을 일으킨다는

경남 창원시는 관내 하천의 주 오염원

인 오·폐수 무단방류를 근원적으로 차단

하고 오염물질 누출시 조기 적발이

가능한 오염원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본

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것이 생산·공급자 측의 설명이다. 이 활성미네랄은 L당 500원대의 저렴한 가격대로서 적은 양의 주입으로도 SS, BOD, COD 등의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 축산폐수처리장, 염색폐수 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등에서 많은 호평을 얻고 있는 중이다.

[환경경영우수상] LG화학 청주공장

LG화학 청주공장(대표 성재갑)은 79년 치약공장으로 출발한 후 생활과 밀접한 장식자재, 생활용품, 정보전자소재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화학은 폐기물처리 원칙을 최종정화(End-of-pipe)에서 원인감소(Source reduction)로 전환, 환경경영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ISO 14001인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협약체결, LCA(Life Cycle Assessment)도입 운영 등의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비했다. 또한 자체기술력을 바탕으로 폐수증발 농축시스템, 회전식 여과집진기 등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했다.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장 개발, 환경 친화기업 협의 운영, 협력회사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공장은 발생폐기물은 재활용(69%) 후, 가연성은 전량 자체 소각 후 에너지를 회수, 연간 12.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대기분야에서는 97년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49%, 폐수는 86%나 절감했다.

폐유기성자원, 사료화기술 개발

폐유기성자원(남은 음식물)에 복합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음식발효 사료화 기술을 개발, 양돈농가에 사양시험한 결과 성공했다고 생명과학연구소는 밝혔다.

생명과학연구소(연구책임자 윤병대)는 음식 발효화 공정에 대해 운반→저장조→발효조→숙성조→곰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저장조에 복합생물제제를 첨가하고 배합사료와 밀기울을 이용, 수분을 조정하여 발효조에 55℃로 4~5시간 발효시킨 후 숙성조에서 상온으로 18~24시간 숙성시켜 축돈에 먹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폐유기성자원의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에 따른 배합사료 원자재 수입절감 효과와 복합미생물 제제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매립지 부지산정 및 침출수 문제 등 폐유기성 자원에 의한 환경오염문제 해소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오직וך 찾아

울산시가 기업체의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기 오작동이 많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국가 산업단지내 48개 기업체에 170대의 자동 측정기를 설치, 시청 데이터실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9개 업체에서 70여차례나 기기가 잘못 작동돼 수질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국가산업단지내 동부난용화학에서는 감지기가 일어 45차례,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동해필름는 낚은 감지기에 이물질이 끼어 16차례나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각각 오작동 됐다.

창원시 오염원 추적시스템 본격 가동

경남 창원시는 관내 하천의 주 오염원인 오·폐수 무단방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오염물질 누출시 조기 적발이 가능한 오염원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기초에 개발돼 사용중인 도시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에는공단지역내 모든 오·오수관로 정보와공단업체별 사용원료, 오·폐수 성분분석자료 등이 모두 입력돼 있다.

또 오염사고 발생시 오염물질 유출경로를 역추적 하는 네트워크 분석기능과 오염물

질 성분 분석 후 이미 구축된 업체별 오염원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동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프로그램을 경량화해 노트북에 탑재, 휴대가 가능하도록 개발돼 있어 오염사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운영해 배출업체를 추적, 오염물질 차단과 방제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수로 냉방을 한다’

실제로 지역냉난방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나 폐온수를 많이 발생하는 산업체, 곧 문을 열 영종도 신공항 등이 냉방에 온수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버려지는 폐열·폐온수를 이용, 냉방함으로써 계절적인 수급불균형 해소는 물론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가능한 것은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원리는 리튬브로마이드(LiBr)라는 흡수제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 흡수제는 온수를 이용 가열하면 냉매증기를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다.

특히 CFC냉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존층 파괴에 따른 환경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장비다. 이와 관련한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센추리의 윌하연 사장은 “주 수요처인 건설경기가 불황이라 어렵지만 20년 이상 냉동기만 생산 해온 전문기업으로 앞으로도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감 장치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64% 제구실 못해

전국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64%가 제구실을 못하거나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올 환경부 예산심의에 대비해 현재 운영중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무용지물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경북 예천처리장은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7ppm으로 수질기준(30ppm)을 초과했고, 충남 금산의 금성처리장은 처리용량이 300t 규모이나 실제 오·폐수 유입량은

8%에 불과했다. 충북 단양의 적성처리장은 오·폐수의 유입농도가 방류수 수집기준보다도 낮아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반면, 경북 영주의 적서처리장은 유입 오·폐수의 설계농도가 BOD 90ppm이나 실제 유입되는 오·폐수 농도는 478ppm으로 5

지역냉난방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나 폐온수를 많이 발생하는 산업체, 곧 문을 열 영종도 신공항 등이 냉방에 온수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버려지는 폐열·폐온수를 이용, 냉방함으로써 계절적인 수급불균형 해소는 물론 에너지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

배 이상 높아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물질 처리 위한 용수사용량에 대한 부과경감의 적용시점

◎질문
환경부환제 67100-267(98년 10월 13일) 호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근무자들의 일상적인 생활 용수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용수사용량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질의회신 내용의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합니까? 98년 9월 30일자 질의에 대하여 98년 10월 13일자로 환경부에서 회신하였는데 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감에 대한 적용시점은 언제 인가요? 회신일자를 기준합니까? 회신일자를 기준한다면 해당기분은 언제부터이며, 일할계산을 해야 합니까? 만약,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소급적용시점은 언제까지입니까?

◎답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바, 동 질의회신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용수사용량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하수처리장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용수사용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서 질의회신 일시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한 용수를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입니다.

생활하수처리용 인공습지기술 개발

생활하수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정화능력과 물리·생물학적 기술을 복합한 하수처리공법이 개발됐다.

상원EnC가 개발한 생활 하수처리용 인공습지기술은 갈대와 자갈, 미생물을 이용해 습지가 갖는 오염물질의 여과나 토사유출 방지, 산소생산, 영양염류 순화 등 수질보전기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를 적용한 공법으로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았다.

특히 자연정화기능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유지관리가 쉽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절감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공법은 유기고형물을 가라앉혀 산화, 분해해 제거하는 전처리시설과 함께 유량조정조, 습지조로 구성됐고 오염물의 부하 변동이나 계절변화에 따른 정화효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습지조 전·중간단계에 폭기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자갈과 갈대를 이용해 입자성물질을 흡착·여과하고 유입수질을 균등화해 수질정화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처리수의 반송장치를 설치해 수질과 수량변동에 따른 충격부하를 방지하고 있다.

고도처리시설의 설치 없이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데다 기계식처리방법에 비해 설치비와 유지비가 절감될 수 있어 농촌지역의 하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의 후단처리 등 소규모 생활하수의 처리가 가능하고 광산 폐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양평군, 최초로 '오염총량제' 2003년 실시

양평군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양평군 전역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02년까지 수계별, 권역별 오염원 분석과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연간 오염물질 발생 총량을 산정할 예정이다.

오염총량제는 상수원 인근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오염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한강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아직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공사장 소음 발주기관도 배상책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물론 발주기관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남구 주안5동에 거주하는 김모(45)씨 등 주민 95명이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발주기관인 N구청과 시공사인 J기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N구청과 J기업은 이들에게 총 5천361만5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지난 12월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공사장 주변의 소음도가 평균 90~100dB로,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70dB을 크게 초과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환경성검토, 85개 사업 '철폐'

정부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정영만 국토보전과장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8월부터 현재까지 신청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145건 가운데 58.6%인 85개 사업에 대해 취소 또는 반려, 축소 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KEI 김지영 환경영향평가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의절차 계획수립, 검토, 협의 단계 등으

'자율환경협정'은 종전 행정기관이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일률적으로 단속했으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신사업형이다.

로 세분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동제도를 전문적인 수행과 제도개선 및 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검토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무춘 연세대 교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들의 환경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독일이 활용하고 있는 '생태위해성 분석기법'을 도입, 정확한 환경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기업체, '자율환경협정' 체결

인천시는 지난 12월 4일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동화기업(주) 및 (주)세분금속, 동일레나운(주) 등 57개 기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으면서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협정을 맺게 됐다. '자율환경협정'은 종전 행정기관이 각종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를 일률적으로 단속했으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 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신사업형이다.

협정 내용은 먼지, 아황산가스, 질산화가스, 일산화탄소 등 대기분야와 이온농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폐수발생량 등 수질분야 등이며, 기간은 5년이다.

시(市)는 이들 협정체결 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 현판 부착 및 환경개선자금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99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제일제당(주) 및 대우자동차(주), 인천제철(주)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80여개 업체와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해 지역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제도는 기업에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에는 단속에 따른 인력 낭비를 줄여주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자율환경관리제 도입

부산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자율환경관리제가 도입된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 10개 업체와 남구 감만동 연합철강에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자율환경관리협약은 환경당국이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직접 환경개선목표, 계획을 세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자율관리협약 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치의 20~6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자율관리 오염물질 대상은 대기 부문의 경우 먼지, 악취, 휘발성유기오염물질(VOC), 수질 부문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등으로 정했다.

자율관리협약업체 중 연합철강, 한국전력, 고려원전 등은 먼지와 COD를, 대우통신(주) 부산공장, 한국주철관공업(주) 등은 먼지를 자율관리하기로 했다.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지원, 연 4회 이상 사업장점검이 연 1회 환경실태진단으로의 전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포철 폐열로 사무실 대운다... 연간 1000억 연료비 절감

최근 유가상승으로 에너지 절감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포철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사무실, 인근 주택단지 난방용으로 적극 활용, 에너지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포항제철소 코크스, 제강, 열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무려 600-1천도. 여기서 나오는 폐열은 대형 보일러를 통해 260도의 증기나 90-105도의 뜨거운 물을 만들어 발전 또는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폐열을 활용하기 전에는 증유와 제

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했으나 폐열을 재활용하면서 포철은 연간 1천억원 상당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폐열이용은 제철소 내 사무실과 직원 식당, 본사건물, 인덕주택단지 등 제철소 주변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로부터 포항지역난방 공급사업허가를 얻은 포철은 지난 7월 총 285억원 을 들여 제철소에서 15km 이상 떨어진 효자주택단지를 연결하는 온수배관 공사에 나서고 있어 완공시점인 을 11월쯤 지역난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온소각시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소형소각로가 일제히 정비된다.
부산시는 지난 12월 5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학교 등에 설치된 1천54개에 달하는 소형소각로의 40%의 자진폐쇄 조치에 이어 올해 중에는 50%를 더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형소각로 일제히 정비

저온소각시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소형소각로가 일제히 정비된다.

부산시는 지난 12월 5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학교 등에 설치된 1천54개에 달하는 소형소각로의 40%의 자진폐쇄 조치에 이어 올해 중에는 50%를 더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구·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소각로 설치 시설을 방문, 자동온도기록계 점검과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관리인 근무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업체들에게 자진폐쇄권유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받아온 이들 200kg/h미만 소각로가 지난 10월16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등 대기오염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받게 되면 대부분 난로형태인 이들 소각로는 가스 등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유지를 위해서는 세정집진시설과 여과집진시설 등 방지시설을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기존 설치비용의 3~5배 이상 소요돼 폐쇄가 훨씬 효율적이다.

울산에 친환경 지방사업단지 조성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 8만여평 규모의 첨단 친환경 지방사업단지가 조성된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온산국가공단과 4개 농공단지의 잔여부지가 없어 부지난이 심화됨에 따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대 8만 1,000여평에 모두 190억원을 들여 첨단 친환경 지방사업단지를 오는 2004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을 들여 기본 용역에 들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02년말까지 지방사업단지 지정과 기본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03년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또 민간업체의 대행개발이나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당 34만 원선인 평당 조성비를 상회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방침이다.

쓰레기 이용, 화력발전소 건설 가시화

전남 나주시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화력 발전소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2월 13일 "미국의 에너지 환경사업 기업인 (주)골든엔알지(Golden NRG.LLC) 측과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확보 등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주)골든엔알지사는 이 각서에서 조속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최대한 지역 주민 고용, 현지법인 설립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번 양해각서 교환으로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골든엔알지사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1억2천만 달러(1천5백억여원)를 투입, 시간당 3만㎾의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첫 민간 발전소로 기록될 이 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고용인원 1백50여명과 연간 20억여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PRTR에 대하여

환경청은 PRTR(環境汚染物質排出移動登錄)을 일본에 도입하기 위하여 通商産業省과 공동으로 「특정화학물질의 배출량과약 등, 관리개선추진에 관한법률」을 정리하였고 同法律案은 99년 3월 16일 閣議決定되어 국회에 제출, 衆議院에서 일부수정 후 99년 7월 7일 參議院에서 가결되어 성립, 7월 13일 공포되었다.

PRTR은?

P R T 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環境汚染物質排出移動登錄)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을 등록하여 공표하는 방식」으로 행정청이 사업자의 보고와 推計에 근거하여 대상화학물질의 대기, 물, 토양에의 배출량과 이동량을 파악하여, 집계, 공표하는 것이다.

PRTR는 다음과 같은 다목적 의의가 기대되고 있다.

- 환경보전상의 기초데이터
- 행정에 의한 화학물질 대책등의 優先度 決定시 판단자료
- 사업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자주적인 관리개선 추진
- 국민에게 정보제공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배출상황, 관리상황에 대한 이해증진
-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보전 대책의 효과 추진사항의 파악

PRTR의 실시에 대하여는 작년 7월 13일 공포된 -특정화학물질배출량 파악 및 관리개선 추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법률에 기초된 최초의 보고는 올 4월부터 1년간의 배출량을 사업자들이 자신이 파악하여 내후년 4월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및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3월 법령으로 지정되었다.